



해병대원
특검법
4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황
5, 7, 16면

1960~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12~13면

우크라이나
전쟁
6~7면

한 노무사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4면



채 해병 사망 진실 은폐

윤석열은 부패한 정치인

관련 기사 4면



5월 15일 나크바의 날 대학생 국제 행동

200여 명의 한국 대학생들도 행동을 하다

‘나크바 76년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국제 행동의 날’ 집회·행진이 5월 15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렸다.

같은 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파키스탄, 칠레,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서울 집회에는 내외국인 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는데, 근래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에 인종 학살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운동에 연대를 표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모인 참가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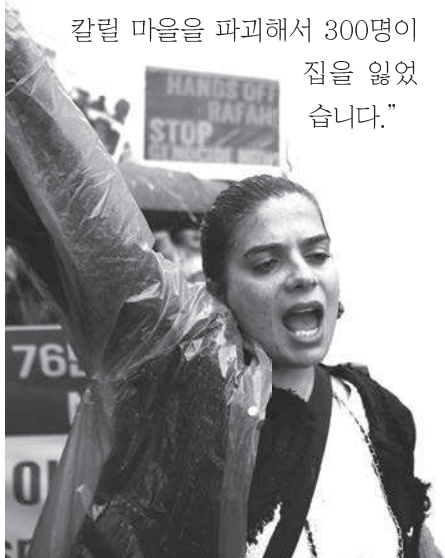
미국 대학생들이 시작한 캠퍼스 점거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텐트 농성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 내 농성·집회들에 참가하며 교류해 왔던 학생들은 서로를 반기며 격려했다. 처음 참가한 학생들도 많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소개를 주고받았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주마나 씨가 발언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최초로 팔레스타인 연대 농성을 시작한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의 회원이다.

“저는 나크바에서 생존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출신인 것이 명확한데도 이스라엘은 저의 팔레스타인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700만 명의 해외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가 겪는 현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도 나크바를 겪습니다. 나흘 전에도 이스라엘 점령군이 와디 칼릴 마을을 파괴해서 3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5월 15일 집회 참가 대학생들이 빗줄기를 이겨 내며 서울 홍대입구역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나크바를 끝내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고려대학교 학생 윤진 씨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행동을 식민 지배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선배 대학생들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팔레스타인은 76년째 이스라엘의 식민지입니다.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 등지로 쫓겨났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던 곳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대학생들이 군사 독재 시절 탄압받았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재판 없이 군사 법정에 기소돼 평균 1년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운동의 중심지 미국에서 온 유학생도 발언에 나섰다. 연세대 재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 엘리사 씨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안전지대라고 불리던 라파호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말입니다. 그들 모두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막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네타냐후와 바이든은 대학생들의 팔

레스타인 연대 행동을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대계 영국인 유학생 에이바 씨가 이를 통렬히 반박했다.

“저는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죽음에 대한 애도의 순간마저도 휴대폰으로 촬영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현재진행형 인종 학살입니다!

“홀로코스트 때문에 제 가족의 역사가 바뀌었고 수많은 유대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이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발길을 멈추고 집회를 지켜보며 카메라에 담는 행인들을 볼 수 있었다.

집회 사회자는 집회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간식과 음료수를 주최측에 전해 주고 간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소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행진에 나섰다. 이집트인 청년들이 가져온 큰 북을 치며 행진 대열 앞에서 흥을 돋웠고,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리만 씨가 구호를 선창하며 대열을 이끌었다.

“Student,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단결한 학생은 패배하지 않는다)! ”

“We will not stop, We will not rest(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겠다)! ”

거리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면

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대열을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 “지지합니다!” 하고 외치며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익사이팅”

집회에 참가한 한 인도네시아인 유학생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집회가 익사이팅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와서 좋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처음 참가한 성균관대학교 울전캠퍼스의 한국인 학생은 행진이 큰 주목을 받은 것에 고무받은 모습이였다.

“[집회와 행진]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거리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유학생은 이날이 살면서 처음으로 참가한 시위였다.

“오늘 집회에 참가해서 매우 감동적이었고 뿌듯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행진 대열을 매우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우애를 다졌다.

임준형

웹사이트에서 축약되지 않은 취재기 전문과 더 많은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다.



나크바의 날 국제 행동 서울 집회

다국적 참가자 500여 명이
기세 있게 집회와 행진을 하다

5월 18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나크바의 날 국제 행동 집회가 열렸다.

5월 15일 나크바의 날은 1948년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팔레스타인인 80만 명을 내쫓고 팔레스타인 땅을 강탈한 사건인 나크바(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를 기억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흐로 이스라엘이 깊숙이 진격하는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을 여전히 분쇄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 물결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대학 캠퍼스와 지역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집회, 행진, 농성 등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 5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고 그 수는 행진을 하면서 더 늘어났다.

나크바의 날을 기해 열린 집회인 만큼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리만 씨가 집회 사회를 봤다. 나리만 씨는 조부모가 나크바 때 고향을 잃은 팔레스타인 난민 3세대다.

“조부모님께서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도 고향 집 열쇠를 문 옆에 걸어 놓고, 다시 그 열쇠로 고향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날을 꿈꾸셨습니다. ... 조부모님들은 생전에 그 꿈을 이루시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언자는 나리만 씨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서울시립대 학생 강미령 씨였다. 강미령 씨가 무대에 서자 저마다 자신의 캠퍼스에서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내외국인 학생들이 팻말을 들고

함께 나와 무대를 가득 메웠다.

강미령 씨는 캠퍼스 연좌 농성의 경험을 전했다.

“연좌 농성 텐트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학생들에게 만남의 장이자 결의와 연대를 다지는 장이 됐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지 방문을 오고 자리를 지켜 줬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졸업생인 이리스 씨는 대학 당국과 프랑스 경찰에 맞서고 있는 모교 친구들의 소식을 전했다.

“소르본 대학교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하며 5월 7일 대학을 점거했지만 대학 당국은 경찰을 불러들여 학생들을 탄압했습니다. 86명의 학생들이 체포됐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 팔레스타인 시인 마르완 마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시를 쓰려면 새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새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면 전투기의 굉음이 멈춰야 한다.’ ...

“우리는 팔레스타인 여성, 어린이, 남성 모두가 새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양산에 소재한 모스크의 이맘인 아

므루 씨는 부산과 인근 도시의 운동 상황을 전했다.

“부산에서 7개월 넘게 지속된 연대 운동은 규모와 기세가 점차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울산과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대 운동이 남부 지방에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서 온 김진석 씨도 최근 울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규모가 늘었고,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멈추지도 쉬지도 않고

5월 18일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산 일선사의 주지인 장적 스님은 44년 전의 그 항쟁에서 스러져 간 사람들과 현재의 전쟁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했다.

마지막 발언자는 이집트인 정치 난민인 알리 씨였다. 알리 씨는 이집트 독재자 엘시시가, 이스라엘이 라파흐 공격 과정에서 이집트와 맺은 평화협정을 위반한 것은 좌시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의 행진은 에너지가 끊어 넘쳤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

이 한데 어우러진 시끌벅적하고 활력 넘치는 행진이었다.

캠퍼스에서 연좌 시위를 이끈 내외국인 대학생들이 구호를 선창했다.

행진 대열은 가는 곳마다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내외국인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행진 내내 참가자들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고 구호를 외쳤다.

주말 나들이 인파로 가득한 명동 거리를 빠져나온 대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행진 도착지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참가자들은 길게 늘어선 대열을 돌아보고는 한껏 고무돼 더욱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미국인 영어강사 데빈 던 씨는 “오늘 집회에 처음 왔는데, 정말 설레고 신납니다” 하고 기자에게 말했다.

파키스탄인 여성 발바샤 씨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팔레스타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고, 미래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열 살인 제 아들도 함께 싸우기 위해 오늘 처음 집회에 나왔습니다.”

필리핀인 유학생 조셉 몬타라 씨는 벽찬 표정으로 “오늘 집회는 지금까지 열린 집회 중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핀란드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하다 온 한국인 단 씨는 이렇게 전했다. “매우 매우 힘찬 시위였고 팔레스타인을 위해 계속 싸울 동기를 부여해 줬어요. ... 한국에서도 바쁜 삶 속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자랑스러워요.”

기층에서 계속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원웅·이재혁

웹사이트에서 축약되지 않은 취재기 전문과 더 많은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다.



천막 농성 중인 서울대학교의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주마나 씨가 집회 대열을 이끌고 있다

윤석열을 수사하라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 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둬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덮으려 애먼 사병들을 동원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지난해 범정부적 수해 대책이 시급할 때 윤석열은 이를 나 몰라라 하고는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지원하려고 우크라이나로 갔다. 그때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수해 현장에 가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수해 지역에서 잇따라 참사가 터져 수십 명이 사망하며 문제가 커지자 자세가 돌변했다. 정부는 보여주기 식으로 사병들을 다급하게 수해 구조와 복구에 동원했다.

젊은 사병들이 장갑차도 입수를 포기한 강한 물살 속에 맨몸으로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의무복무를 하던 평범한 배경의 사병들이 대통령의 책임 면피를 위해 희생된 사회 계급 문제인 것이다.

애초에 윤석열은 채 해병 죽음에 정치책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경찰에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고 외압을 넣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의 면책을 위해 박정훈 대령이 속죄양이 됐다.

특검(법)에 대한 비판적 지지

채 해병 사망을 둘러싼 이 모든 과정이 수사되어야 한다. 특검법은 해병대원이 죽음에 이른 과정과 수사 외압, 경북경찰청에서의 수사 기록 회수 등을 모두 수사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의 관여 사실뿐 아니라 '왜 그랬느냐'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이 걸려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입수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기소를 위해 필수적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지만, 진실은 더 큰 시야 속에서 봐야 알 수 있다.

물론 특검이 진실을 속시원하게 밝



채 해병 사건의 진실과 책임 규명 가능성은 특히 대중 투쟁에 의해 커질 것이다

혀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특검이 대중들이 원하는 만큼 의욕적으로 나서리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의지 문제만도 아니다. 특히 권력 문제다. 박근혜·최순실 특검 때나 기무사 계엄검토 의혹 수사 때는 수사팀이 대통령 경호처나 군인들과 대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 이는 윤석열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수처에 대한 환상과 민주당의 역할을 기억하라

한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든 말든 해야 한다며 시간을 벌려 한다.

최근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높였지만 너무 더디다. 참사가 난 지 1년이다 돼 가는데, 이제서야 해병대 지휘관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정권의 압박과 진실 부인 속에서 수사가 지체돼 온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 공수처장에 임명될 오동운은 윤석열이 추천·임명하려는 자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이 임명한 자의 지휘 아래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게다가 오동운은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으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편법 특혜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에게조차 훈계를 들을 정도로 뒤가 구린 자다.

오동운의 딸은 오동운에게 돈을 빌려 엄마(오동운의 처) 명의의 주택을 샀다. 이 희한한 거래는 증여세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자가 공수처장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출범 3년간 공수처가 제대로 된 권력형 부패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본지가 거듭 지적했듯이, 공수처는 권력에서 자유로운 정의의 사정 기관이 아니라 '검찰2'일 뿐이다.

그런 공수처가 정치적 압박을 무시할 수 있을까?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도입하자는 쪽은 민주당 자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 없이 다시 '검수완박'을 꺼내려고 한다.

채 해병 문제도 계급 문제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자신이 연루돼 있으므로, 진실과 책임 규명 가

능성은 무엇보다 대중 투쟁에 의해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5월 25일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윤석열이 진작에 거부권 행사를 표명했으니 시간 낭비 않고 거부권 행사 전부터 대중 집회를 열어 압박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채 해병 사건을 부각시키며 기층에서 반윤석열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다지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 아쉽다.

노동운동 전체적으로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과 임금 인상 투쟁 등이 확대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채 해병 문제도 계급 문제다.

노동자 저항이 커지면, 정권의 압박으로 진실을 덮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김문성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라파흐 침공에 공모하는 아랍 정권들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군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에 협조하는 이집트·요르단 정부를 규탄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물결이 더 거대하게 분출할까 봐 겁에 질려 있다.

지난 일요일(5월 12일) 이집트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루고 있는 대(對)이스라엘 소송에 공식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인종학살) 협약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의 이번 행보는 그간 엘시시 정부가 시온주의에 맞서지 않았던 것, 특히 지난주 이스라엘의 라파흐 검문소 장악을 방관했던 것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집트 정권이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최근 몇 달간의 전쟁 중에 라파흐 국경 봉쇄 강화로 [이스라엘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시온주의 적(敵) 세력이 이집트 턱밑까지 다가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집트 대중 저항 분출할 것인가

"이집트 측의 양해가 없었다면, 또는 이집트 지배계급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점령 [유지]에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그 특권집단의 얼굴에서 아첨과 유약함을 읽어내지 못했다면 적은 감히 라파흐 검문소를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집트 정권은 시온주의 적 세력이 평화 협정과 안보에 관한 그 부속 문서들을 파기한 것을 눈감아 주고 있다. 그 협정 등은 점령군이 라파흐 검문소의



요르단 남부 후세인 빈 탈랄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하는 요르단 학생들

팔레스타인 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로 돼 있었다.

"이집트 영토 안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압델 파타 엘시시의 감옥·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엘시시의 보안 기구에 쫓기는 중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감히 라파흐를 대상으로 그런 작전을 펼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비롯한 여러 방식의 연대 행동을 조직해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적인 이집트 턱밑에 와 있다. 저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항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안보도 민생도 없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Arab regimes complicit in Israel's invasion of Rafah' (2024. 5. 14) / 번역 김준호

요르단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다

한편 요르단에서는 기존의 저항 물결에 더해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요르단 북부에 있는 수도 암만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암만 도심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과 후세인 빈 탈랄 왕 모스크 인근의 거리를 휩쓸고 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요르단 학생들이 요르단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다. 요르단 남부 마안시(市) 소재 후세인 빈 탈랄 대학교, 요르단 서부 무타시(市) 소재 무타대학교,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시(市) 소재 아르무크대학교, 암만 소재 알자이투나대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요르단 북부 자르카시(市) 소재 하심대학교와 암만 소재 응용과학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요르단의 '저항을 지지하는 학생 포럼' 활동가 테레자는 미국 학생들의 행동이 요르단에서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한 "두려움을 깨뜨려 줬다"고 《네이션》 잡지에 전했다.

이번 주에도 요르단에서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학생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중동 전역의 독재자·왕정을 타도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 팔레스타인인들이 해방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라파흐를 탈출하는 피란민들에게 닥친 새로운 재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서 약 80만 명을 내몰았다. 이번 주에도 점령군은 계속 라파흐를 포위 공격했다.

점령군은 라파흐 서부에 있는 주거 구역 탈 알술탄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군함은 라파흐 해안선을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포탄을 쏘았다.

라파흐에서 쫓겨난 피란민 수만 명

이 현재 가자지구 남부 해안가 알마와시 마을의 난민촌에 몰려 있다.

알마와시 난민촌에 있는 팔레스타인 피란민 마젠 다옴은 이렇게 말했다. "못 살 지경입니다."

"하수도도 물도 없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도, 쓰레기 더미나 폭격 잔해를 치워 줄 지방정부 기구도 없어요.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니 질병이 빠르게 창궐하고 있다. 난민촌 내 많은 사람들이 설사, 피부병, 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대변인 사차 마이어스는 이렇게 말했다. "(알마와시에 있는) 저희 의사 중 한 명은 자신이 의사로 일한 기간을 통틀어 이렇게 많은 간염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란한 팔레스타인인들 일부는 가자

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있다.

5월 20일 이스라엘군은 누세라이트 난민촌을 폭격해 최소 27명을 살해했다. 그중 10명이 여성이고 7명이 어린 아이였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Palestine resistance behind Israeli cabinet splits - New horrors for those trying to escape Rafah' (2024. 5. 20) / 번역 김준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공세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를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주까지 하르키우의 9개 마을을 점령했다.

우크라이나 총정보국(HUR) 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 시간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푸틴이 이미 전쟁에서 패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주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의 어조는 달랐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있는데도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달에 병역법을 개정했다. 징집 대상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두 살 낮췄다. 또, 사기 저하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하기를 원치 않는 징집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약 40만~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모집할 수 있을 듯하다. 그만큼의 청년들이 전선의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파병

젤렌스키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수 공장들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돌아간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막심하다. 올해 초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자 수가 7만 명이고, 부상자는 12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일 것이다.

BBC는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를 5만여 명으로 추정했다(4월 17일 자). 러시아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며 점령지를 늘리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세는 사상자 수를 늘릴 뿐이다.

미국 등 서방은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4월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러시아군이 공격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모습(5월 17일)

하기로 했다.

블링컨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묵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도 영국 무기를 러시아 영토 타격에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 안팎의 영국 군사 시설과 장비를 타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 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다.

친서방 노선을 지향하는 윤석열도 5월 14일 젤렌스키와 통화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유럽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나토 군대가 직접 연루될 수 있는 조처라면 극구 피해 왔다. 그런데 그런 금기가 깨지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4월 29일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다면 프랑스군 파병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 마크롱은 지난 2월에도 파병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도 5월 16일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교관 위주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향후 5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35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 정상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도 이 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의 ‘귀환’을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5년짜리 패키지는] 정치적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메커니즘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면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해 우크라이나를 “운명”에 맡길 거라고 생각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도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미국 대선 후보일 뿐인 도널드 트럼프가 조만간 자신의 친구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기도록 할지 모른다.”(3월 20일 자)

그러나 이런 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구실을 간단히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하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유지에 무심

할 수 없다. 미국의 주요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차이는 역사적으로 무시할 만한 것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켰다!

스톨텐베르그의 5년짜리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제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군은 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퍼센트를 점령했다. 게다가 지난해 6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서방이 제공한 수백대의 전투 차량과 무기들이 파손됐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여론 조사들은 전쟁 초기에 보여 준 전례 없는 단결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파이낸셜 타임스〉, 1월 19일 자)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과 ‘자유’ 우크라이나의 경계선에 있는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1차세계대전 때 서부 전선의 참호 같은 곳으로 말이다.

“2년 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격

▶ 7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제국주의의 동시다발적 위기 때문에
공세로 전환하는 바이든

세계적 제국이 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제국주의는 1930년대에 쇠락하면서 그런 문제로 씨름했다. 오늘날 미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조 바이든은 여러 전선에서 공세를 택했다.

우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군의 유혈낭자한 라파흐 공격의 첫 몇 주는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게릴라군에게는 생존이 곧 승리라는 점은 진부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냈고, 이스라엘군은 남부인 라파흐에 투입하려던 자원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국제 무대의 스텝크” 같은 존재가 됐다. 이것은 원래 아파르트헤이트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의 남아공을 이르렸던 말이다.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을 최대한 지원해 온 바이든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라파흐 공격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에 저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 수뇌부와 전시 내각 내 전직 장성들의 공공연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설령 미국에 더 고분고분한 인물로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가자지구를 다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 문제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패하고 잔혹한 아랍 지배자들이 도와 주기를 바란다.

둘째 전선은 (말 그대로 전선이다) 우크라이나다. 러시아는 병력, 무기 재고, 공군력의 우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북부 경계로까지 밀어냈다. 이미 러시아군은 지난해 우크라



바이든은 더는 어정쩡한 듯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나군의 (결국 실패한) 공세 국면 때 잃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

이제 미국은 공화당의 친트럼프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최근까지 지원 승인이 가로막혔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서둘러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키이우(키예프)를 깜짝 방문했다. 우스꽝스럽게도 블링컨은 한 술집에서 닐 영의 ‘록킹 더 프리 윌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에 발표된 곡]를 연주했다. 냉전 시기를 추억하는 그런 연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유혈낭자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 때문에 유럽 지배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있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그의 보수당 정부 장관들, 전직 장성들은 영국이 전쟁 예비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낸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거듭 거론했다. 그러나 나토의 두 지배적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 그런 멍청한 짓을 막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 전쟁은 아마도 모종의 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그

협상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하려고 자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있다.

헤게모니

셋째 전선은 중국이다. 다행히도 여기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 크기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지위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힘을 견제할 중국의 능력은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의 베이징 방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하이테크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해,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를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 푸틴과 시진핑은 나란히 장문의 공동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패권주의”를 규탄했다.

바이든이 먼저 보복에 나섰다. 다만, 경제 영역에서의 보복이었다. 지난 화요일(5월 14일) 바이든은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다. 전기차에는 최대 100퍼센트, 반도체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태양광 패널에는 50퍼센트,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가 관련 기술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메스꺼운 위선인데, 바이든도 2023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바로 똑같은 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이런 행보는 선거를 의식한 면이 있다. 바이든이 재선 도전에서 맞붙을 상대인 트럼프는 2018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자다. 인플레이션 탓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돼 바이든은 이미 수세에 몰려 있고, 그는 자신이 중국의 경쟁에 맞서 블루칼라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관세 인상은 패권을 지키려는 투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자본주의의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인다는 “녹색 전환”에서 지배적 구실을 하길 바란다. 이 경쟁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지배하고 전기차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이 한참 앞서고 있다.

이 두 경쟁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번역 김중환

▶ 6면에서 이어짐

언인 ‘살고 싶으면 파라’는 여전하다. 참호가 깊을수록 폭탄 파편과 저격수의 총알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3월 28일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갖 첨단 무기

들이 동원된 21세기의 전쟁으로 흔히 묘사되지만, 사실은 제1차세계대전과 닮은 데가 더 많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에 최초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가 거듭 주장했듯이, 러시아만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미국 등 서방은 과거 소련 제국의 영향권을 침해함으로써 푸틴을 전쟁으로 몰아갔다. 특히, 군사 기지와 미사일로 러시아를 포위했다.

유혈 낭자한 전쟁이 확대되면 죽는

사람은 지배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지배자들은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안락하게 지낼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제국주의간 전쟁으로 날이 갈수록 더 크게 고통당할 것이다.

김인식

두 국가 방안, 즉 유대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가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 갖는 방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두 국가 방안의 첫 번째 문제점은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논의돼 왔지만 거기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지도를 펴서 서안지구를 보면 마치 얇은 자국처럼 유대인 정착지들이 온통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이 유대인 정착지를 치워서 그 땅을 비우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두 국가 방안은 실행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약속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그 모든 유대인 정착지를 철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두 국가 방안은 문제가 많다. 부정의하기 때문이다. 그 방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의 5분의 1을 가져가고, 이스라엘은 5분의 4를 갖게 된다. 75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영토의 20퍼센트(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면 충분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700만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정의하다. 심지어 앞서 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수는 유엔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500만~60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리고 나처럼 아예 먼 나라로 쫓겨난 사람들도 200만~300만 명이 있고, 그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두 국가 방안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 팔레스타인인들은 모두 그 좁은 곳에 비좁게 모여 살아라. 거기에 모두가 들어갈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두 국가 방안은 애초에 해법일 수 없었다. 그래서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를 아우르는 비종교적인 단일 민주 국가를 제안한다. 그런 국가는 어떻게 운영될까?

비종교적인 민주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의 구성원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시민들은 인종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그리고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법 앞에 평등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 학자
가다 카르미 인터뷰

“단일 국가로만 팔레스타인 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

가다 카르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1948년 인종청소에 의한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그녀의 가족은 망명을 떠나야 했다. 그 후 그녀는 중요한 팔레스타인 출신 저술가이자 활동가가 됐다. 가다 카르미는 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를 세우는 것만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을 실현할 유일한 길인지 설명한다.

이렇게 시민을 정의하면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둘러싼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유대인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모로코, 에티오피아, 미국처럼 문화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고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비종교적 국가는 현지의 다문화적인 현실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상이한 문화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자연스럽게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종교적 국가는 아랍과 이슬람 사회에서 오랫동안 익숙한 전통에도 더 잘 부합할 것이다. 바로 다원주의와 상호 교류, 자신들과 접촉하는 타종족과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은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뿐 아니라 비교적 근래까지도 이어졌던 것이다.

15세기 스페인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유대인들은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에 정착해 번영을 누렸다. 현대에도 종교적 소수자들은 심지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시리아의 알라위파 정권 같은 전체주의 정권하에서도 평등을 누렸다.

팔레스타인 사회는 유럽 유대인의 대량 이민으로 시온주의라는 배타적 신조가 관철되기 전까지 무슬림, 그리스도인, 유대인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유럽인 등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사회였다. 비종교적 국가에서 종교 관례와 사회 관습은 사적인 영역의 일에 머물고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많은 아랍인들이 “비종교적”이라는 단어가 “무신론”을 의미한다고 우려하며 비종교적 단일 국가에 반대했다. 그러나 비종교적이라는 말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뜻할 뿐이다. 비종교적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서로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월주의 사상, 종족이나 인종에 따른 제도적 차별, 전 국토에 대한 배타적 소유 의식이 억제되고 아주 점진적일지라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바라건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러한 공존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발전해 종족 등에 따른 과거의 분열적인 규정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시온주의와 정면충돌할 것이고 시온주의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 모든 얘기가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런 국가의 수립이 실제로는 유혈 사태를 낳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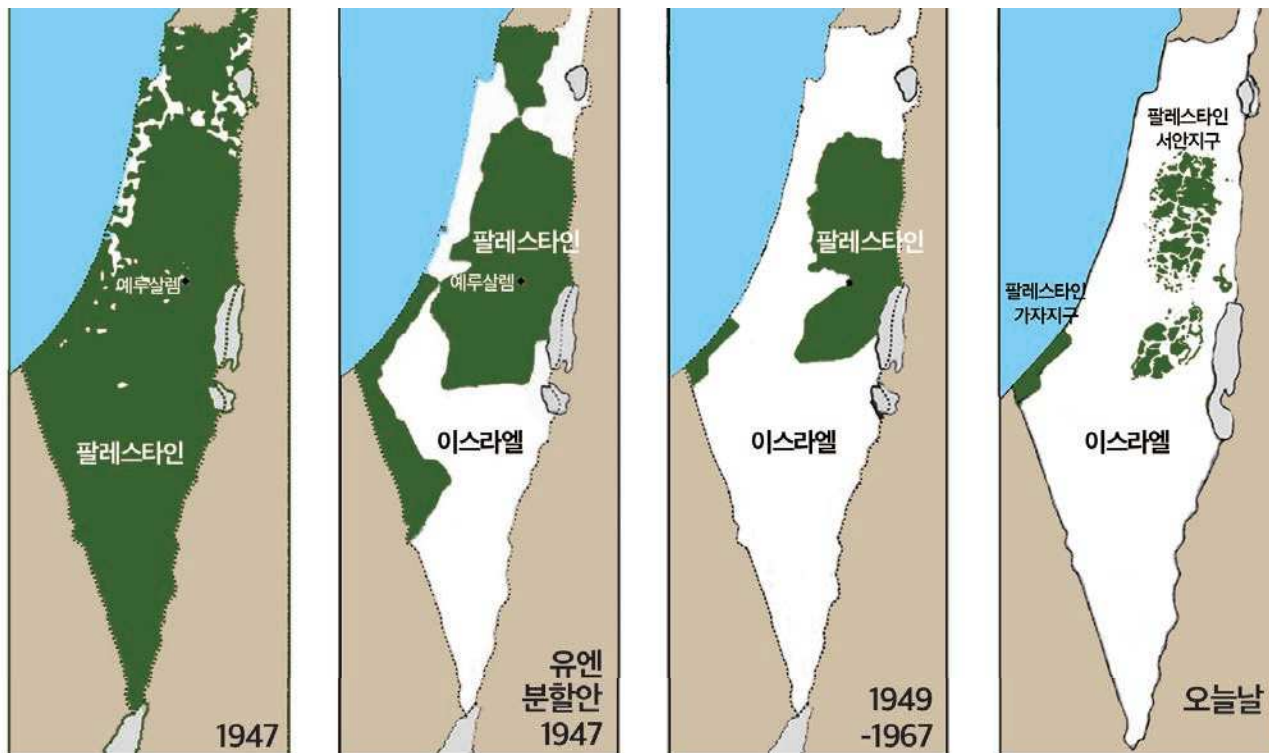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라는 방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해결책을 둘러싼 기존의 고착화된 입장과 관념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관념에 문화적·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서방이 이러한 의존을 조장하는 데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도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단일 국가 수

용어설명

비종교적(secular)

'세속적'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secular를 본지는 '비종교적'이라고 옮긴다. '세속적'이라는 말이 오늘날 세속주의를 함축하며 이슬람과 무슬림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취지로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는 이미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시온주의 국가를 끝장내야 한다

랍이 함축하는 유대인 국가의 종말이 감히 상상해서는 안 되는 전망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부정해 온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그 결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해진 불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지난 세기 거의 내내 겪은 고통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부인해 왔다.

이런 역사 부정과 불의에 대한 응징에서 자유로운 처지를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정착자 식민 지배 프로젝트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특권과, 정착자 식민 지배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랍계 차별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일 것이다.

유대인을 우대하는 체계적인 차별은 유대 국가와 그 산하 기구들에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이 끔찍한 갈등이 '단일 국가 종착점'("해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다)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거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봐야 한다. 어떤 원주민도 결코 원치 않았을 상황이 벌어졌다. 정착자 식민지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의 고향에 들어서 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없다. 출발점부터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출발점부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다. 나의 제안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다.

유일하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여기 우리 땅에 정착자 식민지가 있는데, 이제는 식민지를 없애고 땅을 같

이 공유하자.' 이를 위해서는 귀환할 권리, 즉 추방당하고 고향을 강탈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고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근본적 권리이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가 가능해질까?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부분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대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투쟁과 비슷한 것이다.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전의 익숙한 역사적 갈등의 선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비폭력적일 것이다. 이는 통치권자(현재로서는 이스라엘 국가이다)를 향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권 부여 대상에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거주민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현재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좋다, 너희가 이 땅의 지배자이고 주권을 가진 정부라면, 우리는 너희가 지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요구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니, 그 대신 우리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응 자체가 중요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이전까지 가려진 여러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물러서서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시온주의의 종말을 뜻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평화롭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스라엘의 억압의 주기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이 억압의 주기는 갈수록 더 잔혹하고, 더 유혈 난자해질 것이다. 그 원인은 이 분쟁의 본질이 억압적인 정권이 피통치자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때가 얼마나 멀거나 가까운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저항이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억압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방식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령 알제리, 처음에는 프랑스 다음에는 미국에 맞섰던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카에서 대영제국의 몰락 등 많은 역사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로, 서안지구 주민들을 요르단으로 추방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남은 팔레스타인 거주지에서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강조하건대, 서방 국가들이 허용하는 것이다)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단일 국가'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논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출처 Socialist Worker, "Only a single state can bring Palestinian liberation"—interview with Ghada Karmi (2023, 11, 20) / 번역 최병현

본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다 카르미가 제시하는 비전은 두 국가 방안에 대한 모든 거짓말과 강변을 논파한다.

조 바이든, 리시 수낙, 윤석열은 모두 두 국가 방안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실제로는 두 국가 방안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팔레스타인 당국(PA)과 같은 부역자 세력에게 탄압을 위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방은 시체나 다름없는 두 국가 방안을 되살려 내, 지금의 대량 학살 상황을 해결할 좋은 대안이 있는 척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서방은 그 방안을 수용하도록 베냐민 네타냐후를 회유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기려 한다. 이는 기만극을 펴는 동안 서방은 이스라엘이 제2의 나크바를 일으켜 팔레스타인인을 또다시 대량 추방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멸의 전쟁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가다 카르미가 말한, 온전한 귀환권을 보장하는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를 실현하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다. 그 대안은 제국주의자들이 시온주의를 구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지고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 국가를 압도할 때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중동 전역의 노동자·빈민의 거대한 운동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오직 팔레스타인과 그 너머의 혁명 운동만이 시온주의와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친서방 세계에서도 혁명이 필요할 것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노동자들,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 돌입

캘리포니아대학교(UC)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를 지지하며 5월 20일(월) 파업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 4811 지부는 지난 금요일 압도적 찬성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모든 분회가 파업 찬성을 결정했다.

이번 파업은 경찰과 대학 당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점거 운동 공격에 대한 반격이다.

5월 초 UC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격돌한 이래로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경찰은 UC 어바인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점거를 침탈해 최소 47명을 체포했다.

대학 당국은 경찰을 캠퍼스로 불러들이고 시위 참가 학생·노동자들을 징계했다. 16일 목요일에 UC 당국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캠핑을 일절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이런 공격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캠퍼스 점거 시위 참가자 징계 방침 철회, 학내 시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1 요구로 내걸고 있다.

또, 포함 59억 달러(한화 8조 450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및 그 유관 기업

투자과 미국 군수 기업과의 산학 협력 등을 중단하라고도 대학 당국에 요구한다. 대(對)이스라엘 투자 철회는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운동의 제1 요구이기도 하다.

반격

파업은 UC 산타크루스 캠퍼스에서 시작됐다. 학부생이 1만 9000여 명이고 대학원생이 2000명 조금 못 되는 캠퍼스에서 근로 대학(원)생과 수업 보조 직원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했다. 중식 집회에는 대학원생·교수·연구원이 1000명 넘게 참가했다.

대학 당국은 경제적 요구를 걸지 않는 “정치 파업”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해고 위협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기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 있나요?” 대학원생 스티븐 웁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자 대열은 커다랗게 “아니오!” 하고 화답했다. “연대하면 홀로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하는 외침도 터져 나왔다.

역사학 교수 유리엄 데이비스는 “역사적 파업에 동참해 영광입니다. … 팔레스타인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 자신도 해방될 것입니다!” 하고 연설했다.

이번 파업은 기말고사를 2주 앞두고



5월 20일 파업 1일차 중식 집회 중인 캘리포니아대학교(UC) 산타크루스 캠퍼스 노동자들

시작돼 학사 일정엔 일정 정도 타격을 주고 있다.

UC 산타크루스 당국은 캠퍼스 정문을 폐쇄하고 몇몇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지만, 강의용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할 행정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탓에 이조차도 차질을 빚었다고 학부생들이 외신에 전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폐쇄된 캠퍼스 정문 앞에 “가자지구에는 대학이 남아지 않았다”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그 앞으로 천막 농성장을 옮겼다. 농성은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을 확대하라!”

파업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현재 파업은 전면 파업이 아니라 지명 파업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UC 캠퍼스 중 학부생 수가 가장 적은 산타크루스 캠퍼스에만 파업을 지명한 상태다. 훨씬 큰 UCLA(4만 6000명), UC 버클리(4만 5000명), UC 샌디에이고(4만 2000명) 등에는 아직 파업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5월 21일 현재).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다. 산타크루스뿐만 아니라 다른 캠퍼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임금 등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난민의 경우 장기 구금되곤 한다. 게다가 보호소 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보호소 직원들의 괴롭힘도 다반사다.

구금된 이주민들과 보호소 바깥의

연대 단체들이 지속해서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끝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구금 기간의 상한만 18개월로 정하고, 구금 기간 연장과 재구금도 가능하게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의 구금 상한은 지나치게 길다”며 법무부의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사실 미등록 이주민을 구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저 행정 절차를 위반했을 뿐이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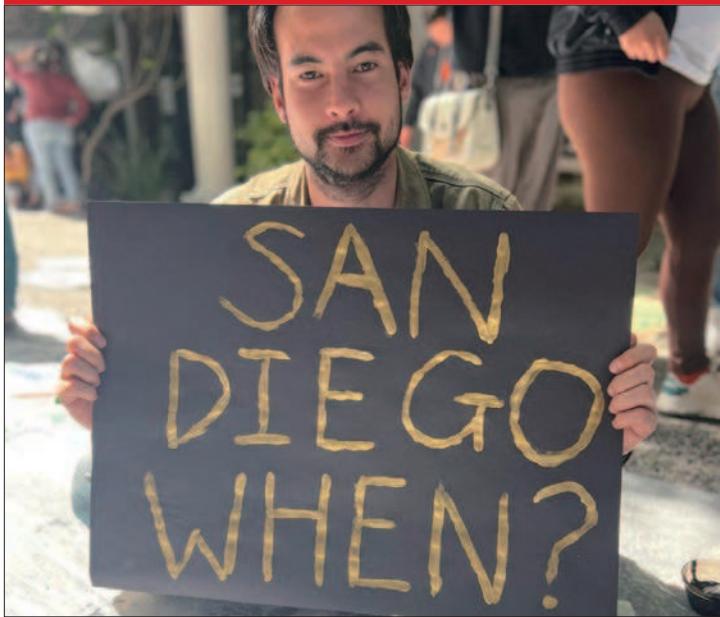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개정안 내용 중에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을 위반하면 구금 기간을 18개월 연장해 총 3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했다.

“이러한 연장은 유죄 판결의 확정, 심지어 유죄 판결의 선고조차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3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개정안이 구금 기간 상한에 도달해 풀려난 이주민을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했다. 개정안은 재구금되면 다시 18개월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다.

“입법 예고안은 법령에 반하는 취업 활동 시 [구금 해제]를 재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입법 예고안은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의 체류나 취업 등 처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들은 체류나 취업의 기회 없이 그림자처럼 머물러야 하고, 먹고 살려는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 모두 언제든 재구금 사유가 될



“샌디에이고는 언제?” 파업 확대를 바라는 조합원

스에서도 여러 조합원들이 수업·채점·근로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

18일(토)에 노조 지도부가 UC 산타크루스를 파업 분회로 지명하자마자 지부 SNS와 웹사이트에는 “대체 왜 산타크루스만이냐” “우리 분회는 언제 지명할 거냐” 등 항의성 댓글이 여럿 달렸다.

파업 돌입 당일에는 여러 캠퍼스의 노동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산타크루스 캠퍼스에 연대 방문했다. 이들은 “다음은 UCLA”, “샌디에이고는 언제?” 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와 농성에 참가했다.

살랭이 파업(노조 지도부 승인 없이 벌이는 파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UCLA, UC 데이비스, UC 어

바인, UC 샌디에이고 등이 잇달아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가 그 캠퍼스들에 파업을 공식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의 승인 없이도 독립적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운동과 파업 중인 산타크루스의 동료들을 지원하는 파업·시위를 준비한다고 밝히는 조합원이 여럿 있다.”

이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발휘하는 위력이 캠퍼스 점거 운동과 결합되면 지금도 정치 위기에 시달리는 바이든과 미국 권력층을 더한층 떨게 할 것이다.

UC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미국 곳곳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이들의 선례를 뒤따라기를 바란다.

김준호

수 있[습니다.] ... 수년간 장기 구금하고 또 재구금해서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대신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개시와 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지만,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 중립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김대권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

다. 기자회견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최대 3년까지 구금할 수 있고 다시 자의적으로 재구금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입법 예고하는 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세계인의 날 취지)이 조성될 수 있을까?” 하고 물으며, 세계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는 법무부의 위선을 꼬집었다.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임준형

우리의 기본 입장 ③

민주적 계획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회주의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노동계급이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순수한” 시장 모델로 묘사한다. 어떠한 계획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이 상품 유통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소비자의 선택으로 시장이 우리 필요를 충족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을 이러저러하게 바꾼다고 해서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시장은 우리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않는다. 기업들은 누구에게도 진정 필요하지 않고 지구를 파괴하는 쓰레기들을 생산해 낸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시장은 자원을 유통하고 사물의 가치를 책정하는 데에서 터무니없이 무능하다.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사회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토론에 기초할 것이다.

외과의사가 메스를 왼쪽, 오른쪽 중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를 투표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병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사회가 외과의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해야 할지 등은 민주주의로 결정할 수 있다.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주택 위기란 실재하지 않는데,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실(空室)이나 빈 건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제2, 제3의 주택을 몰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려면 계획 경제가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한지 추산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 필요 수량보다 약간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 후 모든 집단이나 개인들이 안락한 집을 공급받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치 의료나 교육 부문에서는(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듯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에도 계획은 있다. 그러나 공급 사슬부터 도로 위치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계획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본주의하에서 계획은 소수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주적 계획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거대하고 기생충 같은 존재인 금융 부문을 해체해야 한다. 헤지 펀드가 활개치는 상황에서 민주적 계획이란 가능하지 않다. 평범한 대중이 자금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

민주적 계획 경제는, 모든 결정을 그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려면 권력을 대거 분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분권화는 자본주의를 분쇄하는 모든 혁명적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다. 그런 사회는 북한과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처럼 관료들이 철두철미하게 통제하는 사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가능한 한, 기층 단위에서 일터나 지역 사회의 평의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그 평의회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창의력

그런 형태의 조직들은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기존 사회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것임을 카를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코뮌을 보고 깨달았다.

이런 자기 조직화 수단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 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 착취와 차별에 맞서고, 또 궁극적으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실제 투쟁 속에서 탄생하고 그 사회에서는 다수 대중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누릴 것이다. 사회주의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면 경쟁으로 인한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더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는 관리자나 광고 같은 자본주의의 부조리가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창의력이 만개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썼듯,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자원과 일터·공장·농장을 모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주의, 즉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뜻하는 바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세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개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다룰 것이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운동

1960~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서 배울 수 있다

지금 미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현장에는 “학살자 조”라고 쓰여 있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가자지구의 인종 학살을 지지하는 바이든을 학살자라고 규탄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60년 전인 1965년에도 그 비슷한 슬로건이 미국에서 등장했다. 미군의 베트남 폭격에 반대하는 첫 대규모 시위에서 시위대는 “이봐 존슨, 오늘은 아이들을 몇 명이나 죽였나?” 하고 외쳤다.

린든 비 존슨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였다. 그리고 바이든처럼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다. 그는 1965년에 베트남 전쟁의 확대를 승인했다.

미국은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베트남에 개입하고 있었다. 중국(1949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민족 해방 혁명이 승리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남베트남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돈을 제공하고 군사 고문단을 상주시켰다.

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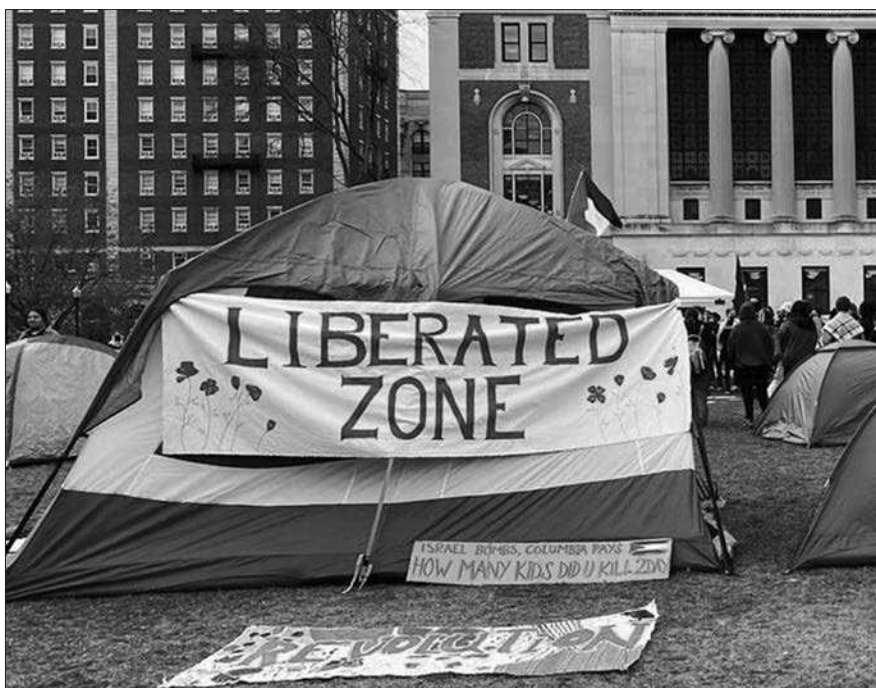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남베트남 군대가 민족해방전선(NLF)의 게릴라들에게 패배하기 시작했다. 존슨의 보좌관 맥조지 번디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가 없다면 ... 1~2년 안에 ... [남베트남의] 패배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존슨은 첫 번째 확전을 명령했다. 베트남 전역에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했다. 해병대 등 전투 부대를 파견했다. 4월 말 베트남 주둔 미군의 수는 3만 3500명이었는데, 그해 말에는 21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베트남에서 벌어진 싸움은 15년 전의 한국전쟁과는 매우 달랐다. 한국전쟁 때는 중국과 북한 지배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규군을 상대로 한 전투였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전투는 억압적인 정권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발적인 투쟁을 상대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소모전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확대는 광



1968년 컬럼비아대의 점거 농성(위)과 올해 같은 대학의 캠퍼스 점거 현장(아래). 그때처럼 지금도 미국 대학생들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전쟁 반대 앞장서고 있다

범한 대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그때까지 반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 수준이었다. 1963년 남베트남 독재자 고딘디엠의 처제이자 악명 높은 경찰청장의 처인 누(Nuh)가 미국을 여행했을 때, 컬럼비아대학교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각각 200여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1년 뒤 뉴욕에서 열린 최초의 반전 시위에는 6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전쟁이 확대된 1965년 봄 ‘민주 사회를 위한 학생들’(SDS)이 주최한 시위에는 무려 2만여 명이 참가했다.

많은 대학교들에서 수천 명이 연좌 농성 등 반전 운동을 벌였다. 5월

21~22일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36시간 동안 열린 ‘학내 정치 토론회’(teach-in)에는 학생 3만 5000명이 참가했다.

전쟁의 역학이 반전 운동의 규모를 키웠다. 1967년 미국 정부는 베트남 주둔 미군을 증강하기 위해 징병을 늘렸다. 그러자 전에는 징집을 피할 수 있었던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 전쟁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가 됐다.

1967년 4월 뉴욕에서 40만 명이 반전 시위를 벌였다. 10월에는 약 10만 명이 수도 워싱턴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중 3만여 명이 무장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국방부 건물로 행진했다. ‘비폭력’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800명 넘게 체포됐다.

1967년 시위는 운동의 전환점이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의 지배적인 슬로건은 베트남의 평화였다. 이제 시위대는 별이 새겨진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붉은 깃발을 들고 경찰과 맞붙었다. 국내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흑인 평등권 운동과 반전 운동의 만남

이런 급진화의 기원은 1950년대부터 전개돼 온 흑인 평등권 운동에 있었다. 1966년 프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함마드 알리가 베트남전 징집을 거부하면서 흑인 평등권 운동이 반전 운동과 만나게 됐다.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보시오, 난 그들 베트콩[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싸울 일 없소. 베트콩은 절대로 날 감동이라고 안 불렀소.” 알리의 챔피언 타이틀은 박탈됐고 선수 생활도 4년 동안 중단됐다.

그이듬해 이번에는 흑인 운동의 지도자이자 상징적인 인물인 마틴 루서 킹 목사가 공개적으로 전쟁을 반대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백악관에 “진보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지 말라는 온갖 종류의 압력이 마틴 루서 킹에게 가해졌다. 그 자신도 그전까지 어떻게든 비폭력적인 중간적 길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마침내 마틴 루서 킹은 미국 흑인들이 자신을 이등 시민 취급하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 것은 “잔인한 역설”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국방에 쓰는 돈이 사회적 개선을 위해 쓰는 돈보다 더 많은 이 국가는 영적인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징집자 중에는 흑인·노동자·빈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베트남 파병 미군 250만 명 중 약 80퍼센트가 그들이었다. 전쟁 초기 미군 전사자의 20퍼센트가 흑인이었다. 미국 전체 인구 중 흑인 비율이 1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사율은 2배에 달한 것이다. 그만큼 더 많은 흑인이 더

1967년 뉴욕에서 벌어진 베트남전 반대 시위

위험한 작전에 투입됐다는 뜻이다.

존슨은 베트남 전쟁을 확대한 반면 자신의 대선 공약들(“위대한 사회”)을 배신했다. 그 때문에 많은 운동 단체들이 급진화됐다. ‘민주 사회를 위한 학생들’(SDS)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다. ‘민주 사회를 위한 학생들’은 1964년 존슨의 대선 운동을 열렬하게 지지했었다. 그러나 1967년 ‘민주 사회를 위한 학생들’은 혁명적 좌파 경향이 대동하는 환경이 됐다.

1968년

1968년은 반전 운동이 성장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준 해였다. 그해는 미국 제국주의의 충격과 함께 시작됐다. 베트남의 설(땀)인 1월 31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남베트남 주요 도시 36곳을 공격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경악한 채 지켜봤다.

50만 명의 미군 병력은 가공할 화력으로 땃 공세를 결국 물리쳤다. 그러나 땃 공세는 남베트남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다면 자국 영토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 줬다.

또, 베트남 상황이 통제되고 있고 어디로 파병되든지 간에 “우리의 아들들”(미군 병사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존슨의 설득은 실패했다.

4월 미국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4월 4일 마틴 루서 킹이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하자 미국 전역의 흑인 게토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전쟁에 대한 분노가 결합됐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혁명가들이 주도한 점거 농성이 벌어졌다.

이 분출의 여파는 8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어졌다.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고 대규모 반전 운동에 시달린 끝에 존슨은 전당 대회 직전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교적 최근에 반전 입장으로 돌아선 청년들은 반전 입장을 표방한 유진 매카시를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존슨이 지명한 휴버트 험프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회장 밖에서 며칠 동안 경찰과 맞붙으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잔인무도한 시위 진압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다.

그 일주일 전에 소련군 탱크가 “프라하의 봄”을 분쇄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소련을 비난했지만, 시카고 거리에서 미국 국가도 소련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평화주의자로서 반전 시위를 하기 위해 시카고에 온 청년들이 시카고를 떠날 때는 혁명적 정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국에서 1968년은 흑표범당과 ‘땃지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에서 일한 흑인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같은 혁명적 조직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해였다.

1969년에는 그 전해 3월 16일 남베트남 미라이에서 미군이 벌인 민간인 대량 학살 장면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1969년 10월 15일 200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반전 시위를 벌였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베트남을 포기하면 미국의 제국주의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문이다.

존슨의 후임인 공화당 소속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0년 4월 캄보디아 침공을 명령했다. 확전을 하면 북베트남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수백 개의 대학교에서 반전 집회를 열었다. 5월 4일 오하이오 주 켄트주립대학교에서 주 방위군이 시위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졌다.

피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350개 대학교에서 동맹 휴업을 했다. 또, 5월 9~10일 전국에서 열린 시위들에 대학생 약 400만 명(전체 대학생의 60퍼센트)이 참가했다.

주 방위군이 대학교 16곳에 개입했고, 잭슨 칼리지에서는 흑인 학생 두 명이 살해됐다.

상처 입은 야수

켄트 참사 5일 뒤 워싱턴에서 10만 명이 행진했다. 닉슨의 연설문 비서관 레이 프라이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도시는 무장한 야영지였다. 폭도들이 창문을 깨고 타이어를 펑크 내고 주차된 차량을 탈취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것은 소위 ‘학생 시위’라고 불렸다. 그러나 학생 시위가 아니라 내전이였다.”

인기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내에서도 반전 정서가 확산됐다. 베트남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병사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곳곳의 미군 기지의 병사 그룹들이 만든 반전(反戰) 지하 신문은 200여 개였다. 신문 제호 중에는 “우라질 군대”(Fuck the Army) 같은 것도 있었다.

탈영이 늘었고, 지휘관을 겨냥한 수류탄 투척이 장교들에게 악몽이 됐다. 병사들의 장교 공격은 1969년

126건이었고 1971년에는 425건으로 늘었다. 전투 참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병사들의 명령 불복종이 만연해졌다.

권력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닉슨의 보좌관들은 그들이 권좌에 올랐을 때 외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만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전쟁을 반대하는 반란에 직면했고, 아마도 국내의 혁명에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뉴욕 타임스〉)

미국 정부는 1973년 1월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하노이를 폭격했다.

2년 뒤인 1975년 4월 30일 미국은 사이공 주재 대사관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 남베트남 주민, 외국인 7000명 이상을 헬리콥터로 대피시켰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제국주의의 첫 패배였다.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굴복하지 않은 베트남 농민·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과, 미국 전역을 휩쓸고 서방 세계 전체로 확산된 거대한 반전 운동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김인식

더 읽을 거리



《세계를 뒤흔든 1968》(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중 ‘미국: 전쟁의 귀환’과 ‘상처 입은 야수’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필자인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그만둔다면, 이는 '사업장 이탈'에 해당돼 미등록 신세가 된다.

적법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해고든, 당사자 간 합의 퇴사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내가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을 "계약"이라고 여기지 않는 까닭이다.

S 씨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다. S 씨가 일하는 곳은 급여가 적고 일이 힘들어, 그는 사업장 변경을 바랐다. S 씨와 함께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도 사장이 사업장 변경 요청을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S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으면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조차 고시는 "사용자의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없는 규정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차별적 규정이다.

나는 S 씨의 대리인으로 최저임금 위반과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체불을 고용지청에 신고했다.

처음에 사장은 뻔뻔하게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부정했다. 그런데 고용지청 출석 전날이 되자 그는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했다. S 씨는 이를 수락했다. 이 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과 체불 임금 지급을 사업장 변경 승낙과 맞바꾼



고용허가제는 이중차별 이주노동자의 조건이 개선돼야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하향 압력도 줄어든다

것이다.

T 씨는 네팔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다. T 씨에 따르면 그의 사장은 일감이 떨어지면, 이주노동자들의 한 달 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변경을 승낙한다고 한다. 물량이 줄어들 공장 가동하지 못해도 사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라리 이주노동자들을 내보내고 한 달 치 임금도 떼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끼

T 씨가 사장의 "승낙"에 사직서를 작성한 날 공장의 다른 이주노동자 3명도 함께 사직서와 한 달 치 급여 포기 약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직서와 약정서는 사장이 주도 면밀하게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한국어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사장님 참, 친절하시기도 하다. 이 사장은 노동자들의 한 달 치 임금을 사업장 변경의 미끼로 사용했다.

억울했던 T 씨는 나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한 달 치 임금에 대해 체불

진정을 넣었다.

M 씨의 사례도 떠오른다. M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적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다.

M 씨의 근무 내역 등을 살펴보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이주노동자들의 통상적인 급여의 한 달 반 치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연차 미사용 수당 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었다. 그 공장의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도 같았다. 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면 사업장의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사용자가 고용지청 출석 조사를 앞두고 사업장 변경 카드를 제시했다.

M 씨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수당을 포기하고 사업장 변경을 선택했고 진정을 취하했다.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나는 설득해 보려 했지만 M 씨는 단호했다.

오히려 사업장을 변경하게 된 M 씨는 그동안의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여느 한국인 노동자였다면, 사장이 처벌되고 S 씨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을 것이다. T 씨는 이직을 위해 자신의 한 달 치 임금을 사용자에게 헌납하지 않아도 됐고, M 씨는 이직을 위해 한 달 반 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 사업장 변경 제약은 더 나은 조건을 바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선택을 원천 봉쇄한다. 싸우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싸울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 이직이 일종의 항의의 수단이기도 한데, 항의의 통로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족쇄가 돼 그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며, 사용자에게는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제공한다.

정부가 빠르게 규모를 늘리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조건이 개선돼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하향 압력도 줄어든다.

고용허가제는 폐지돼야 한다.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 5.3퍼센트(전년 동월 대비)였던 물가상승률은 그해 7월 6.3퍼센트까지 치솟은 뒤 이후 6개월간 5퍼센트대를 이어 갔다. 윤석열 집권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4.2퍼센트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졌다. 지난해 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1퍼센트 줄었다. 2022년(-0.2퍼센트)에 이어 두 해 연속 감소한 것으로, 실질임금이 연달아 감소한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월부터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대 안팎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과와 배 가격이 급등하고, 김밥 등 외식 가격도 크게 올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 줄에 3000원이던 김밥을 이제 5000원에 사 먹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전혀 체감되지 않는 것이다. 라면, 돼지고기 등 서민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3퍼센트 넘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척하고 있지만, 일회성 대책들을 재탕하고 있는데다 지원액도 턱없이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큰돈을 안 써도 수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하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고, 더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월부터 정부가 긴급 농수산물 가격안정 자금으로 마트 등의 가격 할인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금액이 고작 1500억 원밖에 안 돼 효과가 미미하다. 또, 할당관세 제도로 수입 과일·채소의 관세를 낮추



식료품·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고 있지만, 이미 수입 농산물 대부분을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재정 긴축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미미한 정책만 반복하며 물가 인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벌어졌다고 말이다. 팬데믹에 따른 공급 사슬 병목, 가스·석유 확보 경쟁,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식량 가격 상승 압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러나 이런 요소들에 더해 윤석열 정부 자신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 구실도 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끌어올렸다.

최근에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진행된 요금 인상 덕에 올해 1분기에 가스 공사가 9215억 원, 한전은 1조 29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말이다.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 요금은 7월에, 전기 요금은 4분기에 올릴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용량이 적은 때를 골라 요금을 올려 대중적인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냉난방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세, 법인세 감면

등 기업·부유층 감세 정책을 추진해 기업 지원에 열심이었다. 총선 후에도 계속 유예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과 부유층의 이윤을 보호하는 데만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가

지원해, 대기업들의 적자를 메우고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마땅하다.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도 대폭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필품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강동훈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1



팔레스타인 무장저항이 이스라엘 내각을 분열시키다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 전쟁을 두고
쪼개질 것인가?

지난주 이스라엘 내각의 일원인 베
니 간츠는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
협했다.

간츠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
냐후가 실질적인 가자지구 “전후 처리”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간츠는 자신의 문제제기에 네타냐후
가 6월 8일까지 충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내각에서 사임하겠다고 시한에
못을 박았다. 간츠가 사임하면 연정은
붕괴할 것이다.

이런 분열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 전혀 아니다. 그보다
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
항을 분쇄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점령자 이스라엘은 7개월 넘게 전투
를 벌이고도 저항 세력을 분쇄하지 못
하고 있다.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군에
반격하려 점점 더 힘을 합치고 있다.

자발리아 난민촌 등 이미 이스라엘
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포한 가자지
구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은 막대한 사
상자를 내며 고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가자지구 방침에 대한
이스라엘 대중의 신뢰는 역대 최저치
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국가
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과 정부 계획을



사진 출처: Al-Qassam Brigades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저항을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지지하는 것으로 광범하게 단결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인 62퍼센트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더는
믿지 않는다. 간츠는 네타냐후의 가자
지구 방침이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동
맹 관계도 소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
한다.

전직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인 간츠는
테러 국가 이스라엘이 달성해야 할 여섯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중에는 포로 귀환, 하마스 해체, 가
자지구 무장 해제와 더불어 “미국-유
럽-아랍-팔레스타인의 [공동] 기구가
가자지구를 민정 통치”하는 것이 포함
돼 있다.

또한 간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을 돌려보내야” 하며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진척시켜
야 한다고 했다.

간츠는 팔레스타인 당국(PA)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
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츠는 네타냐후가 꿈쩍달짝
못하는 처지임을 알고 있다.

네타냐후 정권 내에서 결정권을 행
사하고 있는 것은 네타냐후의 극우 동
맹들이다. 그자들은 가자지구를 완전
히 초토화하고 싶어 한다.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
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전시 내각 회
의 중에 퇴장했다.

갈란트는 자기 나름의 가자지구 “전
후 처리”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는 “현지의 팔레스타인 당국(PA) 유관
인사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자는 내용
도 있다.

분열해 있는 이스라엘 내각 안에서
어느 쪽도 자기 계획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Palestine resistance behind
Israeli cabinet splits' (2024. 5. 20) / 번역 김준호

이 글을 읽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요구는
양날의 칼이다'(2023. 10.
26)를 읽으시오.



맹렬한 팔레스타인 저항에 고전하는 이스라엘군

이스라엘 국가는 서방의 지원으로 완
전 무장하고 7개월 가까이 전쟁을 벌였
지만 아직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5월 둘째 주말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
스타인 저항 세력은 시온주의 군대를
상대로 격전을 벌였다.

핵심 전장의 한 곳은 가자시티 북쪽
자발리아였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저항
을 근절했다고 주장하던 곳이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은 자발리아
에서 하마스의 3개 여단을 해체시키고
그 지역에서 저항 세력을 제압했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사 1000명을
살해하고 5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았다
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 대변인도 인정하
듯 하마스는 자발리아에서 기반을 회복
했다.

5월 12일 저항군은 자발리아와 가자
시티 내 제이툰 구역, 라파흐 동부에서
이스라엘군 최소 50명에게 부상을 입
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을 시
작한 지난해 10월 이래 부상자가 가장
많이 난 것이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여러 작전과 매복
공격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
탱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하마스가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
다는 것은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군이
점령했다고 주장한 여러 곳에서 재집
결해 전투를 지속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다.

이스라엘군이 아직도 저항을 분쇄하
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총리 베
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국가 전체

에 굴욕이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거의 진압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2월에 네타냐후는 “승리가 눈앞에 있
다”고 했다. 3월에는 이스라엘군이 “하
마스 산하 여단 4분의 3”을 분쇄했다고
했다.

그런데 5월이 된 지금도 팔레스타인
인들의 저항 세력은 테러 국가 이스라
엘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Palestinian resistance is still defiant
against Israeli terror' (2024. 5. 14) / 번역 김준호